I-1. 반도체 수혜지역의 소비는 어떻게 될까: 지역 미시데이터로 살펴본 파급효과

(조사국 조사총괄팀)

※ 자세한 내용은 8.31일 발간된 「BOK 이슈노트 제2026-20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배경

1.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지속하면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내총소득$_{GDI}$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늘어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임금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IT부문의 성장이 내수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증가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지$_{소비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별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반도체 호황의 직접적인 수혜지역$_{이천·화성·청주\ 등}$을 중심으로 소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 본고의 추정결과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에 대한 소비 파급효과만 반영한 것으로, 여타 IT 기업의 임금 상승, 자산효과, 정부 세수확대를 통한 효과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 급증

[그림 1]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영업이익[1)]

주: 1) 연결기준 영업이익
자료: Bloomberg

주요 반도체 기업 성과급 대폭 확대

[표 1]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추정치[1)2)]

	2025년 (FY24)	2026년 (FY25)	2027년 (FY26)
▸ 삼성전자(조원) [DS 부문]	1.1 <0.7>	3.7 <2.2>	39.6 <9.1>
1인당(억원)	0.1 <0.1>	0.5 <0.3>	5.1 <1.2>
▸ SK하이닉스	2.0 <1.2>	3.6 <2.2>	22.4 <12.8>
1인당(억원)	0.6 <0.4>	1.0 <0.6>	5.7 <3.2>
합계	3.1 <1.9>	7.3 <4.4>	62.0 <21.9>

주: 1) < >는 현금화 가능 세후금액 추정치
2) 1인당은 해당금액을 총 종사자수로 나눈 값
자료: 각社 사업보고서, 언론보도, 저자추정

지역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파급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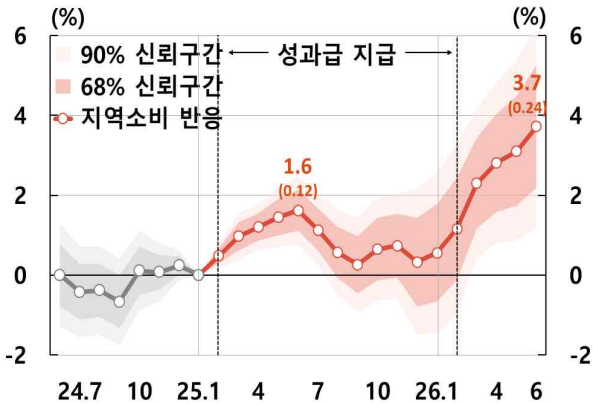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성인인구 중 반도체 종사자의 거주 비중이 높은 '반도체 고노출 지역$_{이천·화성·청주}$'의 월별 소비는 성과급 지급 이후$_{25.1월\ 이후}$ 고가 재량소비재$_{자동차,\ 가전·가구,\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최대 4% 정도 높게 나타나, **반도체 호황이 이미 국내 소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수혜지역의 소비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누적 소비 증가액은 약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연평균 증가액$_{25\sim26년\ 0.8조원}$은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액의 2% 수준에 달한다. 또한 **세후 성과급 대비 소비 증가액으로 측정한 소비파급률은 2025년 27%, 2026년 21%로 추정된다.**

이러한 **소비 증가는 반도체 호황이 없었을 경우**$_{counterfactual}$**와 비교할 때, GDP를 2025년 0.01%, 2026년 0.03%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7년에는 성과급 규모가 크게 늘어날**$_{26년\ 대비\ 약\ 5배}$ **예정임을 감안할 때, GDP 제고 효과도 0.08~0.12%(27년 성장률 +0.06~0.09%p)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종사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성과급 지급 이후 소비가 뚜렷하게 증가

[그림 2] 반도체 고노출 지역의 추정 소비 반응[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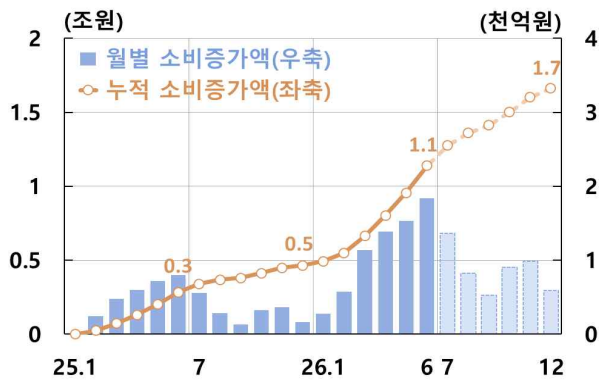


주: 1) 반도체 노출도 1%p당 추정 효과에 전국 상위 3개 지역 평균 노출도(4.9%)를 적용. 수치는 비노출 지역 대비 소비 증가폭
2) 괄호 안 숫자는 전국 평균노출도(0.3%) 적용

자료: 저자추정

26.6월 기준 누적 소비 증가액은 1.1조원 수준

[그림 3] 반도체 수혜지역 누적 소비 증가액[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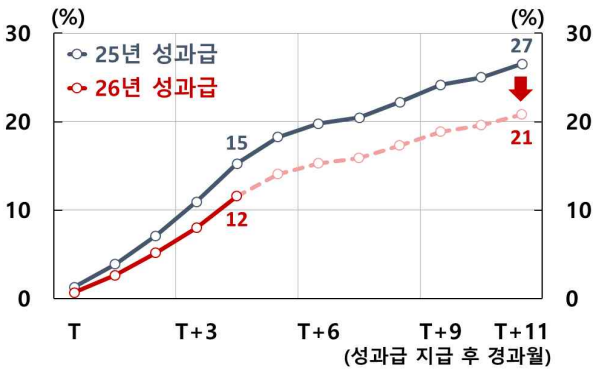


주: 1) 카드 소비금액 기준
2) 점선은 26.7월 이후 소비 반응이 전년도 패턴을 따른다고 가정

자료: 저자추정

성과급의 소비파급률은 양호한 수준

[그림 4] 성과급별 누적 소비파급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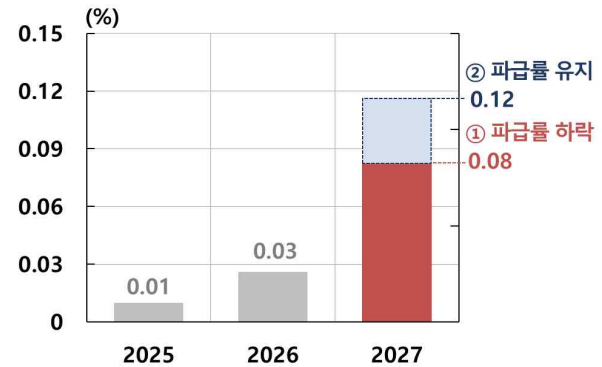


주: 1) 점선은 26.7월 이후 소비 반응이 전년도 패턴을 따른다고 가정

자료: 저자추정

2027년 중 성과급의 소비파급률 시나리오에 따라 GDP 제고 효과는 0.08~0.12% 추정

[그림 5] 2027년 시나리오별 성과급의 소비파급률 및 GDP 제고 효과[1)]



주: 1) ① [보수적 시나리오]는 소비파급률이 성과급 확대 규모에 비례해서 하락, ② [상방 시나리오]는 소비파급률이 2026년 수준을 유지

자료: 저자추정

향후 소비 파급효과 확대의 결정 요인

3. **향후 성장흐름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 수혜지역에서 확인된 소비증대 효과가 지속적이고 폭넓게 확산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❶호황의 수혜가 임금 상승$_{\text{intensive margin}}$을 넘어 고용 확대$_{\text{extensive margin}}$로 이어지고, ❷늘어난 소득이 자산시장보다 소비로 유입되며, ❸소비 증가가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될 경우, 소비 파급효과는 한층 강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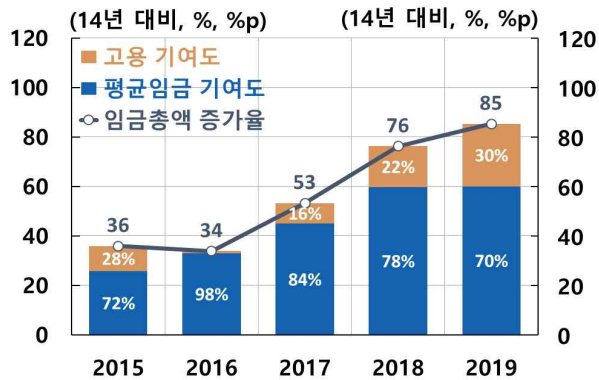
❶ 글로벌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충이 앞당겨지면서 향후 고용도 동반 증가하며 소비 파급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대 반도체 호황기에도 초기에는 기업실적 개선이 근로자 보상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대규모 증설과 함께 고용의 기여가 점차 확대된 바 있다.

❷ 늘어난 소득이 자산시장보다 소비로 이어진다면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 유사한 성과급 충격$_{\text{SK하이닉스}}$에도 청주시의 소비 반응이 이천시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증가한 소득이 주택시장보다 소비로 유입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❸ 향후 소비가 고가 재량재를 넘어 서비스 등 다양한 품목으로 시차를 두고 확산되면서 「소비 → 소득 → 소비」의 선순환 효과도 점차 강화되어 반도체 호황의 성과도 폭넓은 가계로 파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대 제조업 호황기$_{\text{자동차·화학, 울산}}$에도 임금 상승 이후 소비가 점차 서비스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반도체 경기 순환기 후반부로 갈수록 임금총액 증가에서 고용 기여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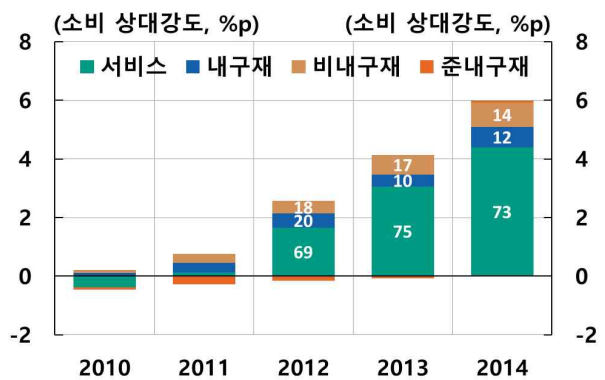
[그림 6] 2010년 중반 반도체 제조업[1] 임금총액 증가율 기여도 분해[2]



주: 1) 경기도, 충청북도 지역 반도체 제조업(C261) 기준
2) 막대 안 숫자는 기여율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과거 자동차·화학 호황기에 울산지역의 서비스 소비가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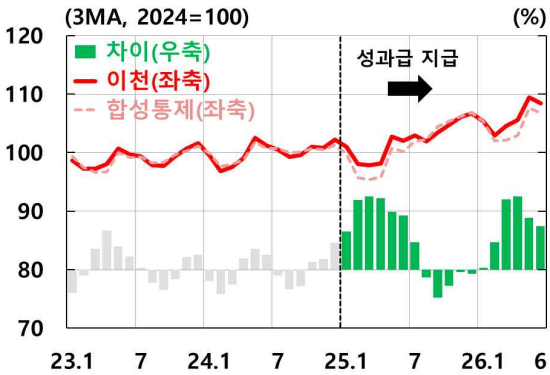
[그림 7] 자동차·화학 호황기 시 울산지역 소비의 전국 대비 상대강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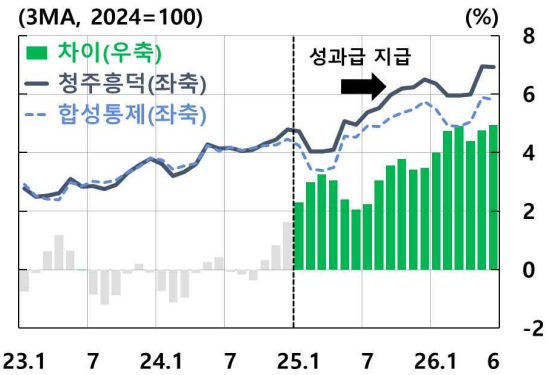
주: 1) 2009년 대비 울산과 전국의 가계 국내소비지출 증가율 차이를 소비 형태별로 분해. 막대 안 수치는 소비형태별 기여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SK하이닉스 공장이 소재한 이천과 청주(흥덕구)의 소비가 모두 비교군을 상회했으나, 이천시의 소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음

[그림 8] 이천시 vs. 비교군[1] 소비 비교



[그림 9] 청주시 흥덕구 vs. 비교군[1] 소비 비교



주: 1) 분석대상 지역과 22~24년중 소비흐름이 유사한 지역들을 가중평균한 합성통제군
자료: NH농협·하나카드, 저자추정

종합 평가

4. **지역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반도체 산업 호황은 이미 국내 소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가 '임금 → 소비' 경로를 거치면서 경제 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실증근거로 볼 수 있다. **향후 성과급 지급 규모 등을 감안하면 소비경로를 통한 파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크기는 ❶호황의 수혜가 얼마나 많은 고용으로 이어지고, ❷추가 소득이 자산시장보다 소비로 흘러가며, ❸소비가 얼마나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우선 반도체 부문의 성과가 여타 산업의 고용 및 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를 아우르는 국내 산업생태계를 강화하여 산업 간 연계효과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늘어난 소득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유입되기보다 소비와 실물경제로 원활히 환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가 서비스업 등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취약부문중소기업,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